



제주공항 불법 드론 매년 160건… 검거는 30%

3년간 339건 탐지·신고… 실제 조종사 확보 103건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중단 운항 차질도 증가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 제공항 인근 상공에서 매년 불법 드론이 잇따라 탐지되고 있지만, 실제 조종사를 붙잡는 비율은 10명 중 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3~2025년) 제주공항 일대에서 탐지·신고된 불법 드론은 3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1건에서 2024년 167건, 2025년 161건으로 증가했다. 제주공항에 첨단 안티드론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 이후 탐지·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찰 등 관계기관이 출동해 실제 조종사의 신병을 확보한 사례는 2023년 1건, 2024년 46건, 2025년 56건 등 103건이었다. 탐지·신고건수 대비 조종사 확보 비율은 30%에 그쳤다.

올해도 8월말까지 제주공항에서 탐지·신고된 불법 드론은 81건에 달했다. 이 중 조종사를 확보한 사례는 23건으로, 전체의 28% 수준이었다.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도 발생하고 있다. 관광객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공항 주변에 드론 출몰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

중단된 사례는 2023년 12편, 2024년 3편에서 2025년 7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말까지 194건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은 공항 관제권 내 드론이 탐지될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한다. 관계기관은 현장에 출동해 조종사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제주공항 중심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적발 횡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제권 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하는 등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 보급 확대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드론 사전 승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항 반경 9.3km 관제권 내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테우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제주대학교 일대 등도 관제권에 포함돼 취미형 소형 드론뿐 아니라 바다 위에서의 비행도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공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날 국내선 도착장에서 입도객을 대상으로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심야시간 문 닫은 식당서 절도 50대 구속

동중 전력으로 지난 6월 출소

영업이 끝난 식당을 돌며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을 돌며 심야시간대 영

업을 마친 식당 등 8개소에 침입해 현금 1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은 제주를 비롯해 광주와 춘천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동중 전력으로 지난 6월 말 출소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현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유리기자

문섬 인근서 실종 다이버 2명 구조… 1명 병원 이송

서귀포 해상에서 다이버 2명이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9분쯤 서귀포시 문섬 인근 해상에서 입수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으로 접수됐다. 이들은 동료 다이버 4명과 함께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동대응을 요청하고 도보수색과 함께 드론을 이용한 항공수색을 실시했다. A씨는 낮 12시42분쯤, B씨는 오후 1시10분쯤 각각 범섬 인근 해안에서 구조됐다.

B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선거법위반’ 경찰 수사·법정 서는 도의원들

경찰, A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투표독려 현수막’ B의원 재판

현역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법정에 서게 됐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의회 A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 측은 6·3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한 선거사무원에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상당·실비 기준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지난 7월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식사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함께 도의회 비례대표의원인 B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B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제주시 연동 일대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일 잘하는 일꾼 뽑는 사전투표! 본투표!’라는 문구의 파란색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 현수막에 대해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송치해 검찰이 B의원을 기소했다.

B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이날 오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공판 전날 B의원 측이 공판심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 판단으로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소정·양유리기자

성산 해안서 차 봉지 마약
작년 발견 마약과 동일 포장

지난해부터 제주 해안가에서 잇따라 발견된 ‘차(茶)’ 봉지 마약 의심 물체가 또다시 발견됐다.

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을 광치기해변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 1점이 발견됐다.

바다환경지킴이가 연안 정화 활동 중 발견해 해양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물체는 약 1kg의 은색 차포장지 형태로,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차 봉지 마약과 동일한 형태로 파악됐다. 또 간이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반응을 보였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포장지 색이 바래고 찢긴 상태로 볼 때, 상당 기간 해류를 따라 떠다니다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하면 개봉하거나 접촉하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기후대응 도시숲 나무심기 17일 제주항 기후대응 도시숲에서 어린이집 원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품트리 나무심기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이재명 비방 영상’ 상영 전 도의원후보 벌금형

선거법 위반 사범 잇단 선고도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옥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제주시민속오일 시장 주차장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지난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돼 출마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지난 대선 때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전투표를 했으나 본투표 당일 투표소를 찾아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는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또 투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C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국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씨니트요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사라향, 설향, 유라, 레몬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맏나뭇

‘씨니트’요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요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요목, 고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자회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요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7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